

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7. 12.(화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이민우 과장(044-203-4210)	담당자	김남혁 서기관(044-203-4211) 김효선 사무관(044-203-4212) 박광일 사무관(044-203-4215) 박성수 사무관(044-203-4214)

「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」 업무보고

- ①성장지향 산업전략, ②국익·실용 중심 통상전략, ③에너지 공급·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·11대 핵심과제 집중 추진

1. 성장지향 산업전략

- ① (민간투자 활성화) 규제혁신, 기반시설 국비지원, 산단 ‘네거티브 존’ 확대 등
- ② (혁신시스템 고도화) 산업 R&D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개 추진, 특성화대학 10개 이상 지정, 전문인력 14만명 양성(~26)
- ③ (성장사다리 복원) 성장역행적 지원체계 개선, 중견기업펀드 4,000억원 조성
- ④ (산업대전환 가속화)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전략 순차 발표

2.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

- ⑤ (공급망연계형 통상) 양자채널 활용,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공급망 재편 대응
- ⑥ (첨단산업혁신형 통상) 첨단 지식·인력 교류 확대, 정상회담 후속 성과 창출*
* 한미 공급망·산업협력대화 본격화 등
- ⑦ (그린·디지털 통상) 환경 규범화에 적극 대응,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
- ⑧ (국제사회기여 통상) 개도국 난제 해결 참여 및 산업성장 경험 전수

3.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

- ⑨ (원전역할 강화) 신한울 3·4 환평과 사전제작 최대한 앞당겨 '24년 건설 추진, 금년 원전 일감 1,300억원으로 확대
- ⑩ (수요 효율화)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등 수요정책 강화
- ⑪ (신성장동력 창출) 에너지혁신벤처기업 5,000개 육성, 5,000억원 수소펀드 조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7.12.(화)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

-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5년간 ①성장지향 산업전략, ②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, ③에너지 수요·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

【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주요내용 】

1. 「성장지향 산업전략」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 추진

□ (민간투자 활성화) 규제개선, 투자 인센티브,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여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 실현

- (규제혁신)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(337조원) 등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 신속 추진

- 26건(66조원) 투자애로는 기 해소*, 27건(271조원) 잔여과제는 「경제 규제혁신 TF」에서 해결방안 마련 추진(상세내용 별첨)

* A사(화학) 산단입주 허용, B사(이차전지) 농업진흥지역 신속해제, C사(조선) 용접용로봇 안전성 기준 마련 및 울타리 규제완화 등

- (인센티브) 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,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 추진

- (입지지원)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*한 산업단지 ‘네거티브 존’ 비율을 상향(30→50%)하고,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

* 단, 도박업, 농업, 건설업 등 일부 제외

□ (혁신시스템 고도화) 산업 R&D체계와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 추진

- (산업R&D) 파괴적·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*하고, 시장창출과 경제·사회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(5년간 10개)를 추진

* ①산업별 최고권위자 중심의 혁신과제 도출, ②경쟁형 방식으로 성과 극대화

- (혁신인재)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
 - 바이오·AI·나노 등 판(板) 기술 분야 창의적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('23년 상)
 - '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*' 도입('23년)을 통해 업종별 지식과 SW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 추진
 - * 업종별 교육 전담기관 지정하여 구직자·재직자 교육과정 운영, 금년중 상세 구성방안 수립
 - '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(원) 10개 이상 지정
 -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신설('23) 등을 통해 '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* 양성 추진
 - * (신산업) 3.9만명, (주력산업) 5.2만명, (탄소중립) 1.2만명, (산업협력) 3.9만명

□ (성장사다리 복원)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원 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하여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

- (성장사다리) 중소·중견·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, 기업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 기업 성장 역행적 인센티브 개편* 추진
 - * 규모별 급격한 지원격차 등 개편방안 마련(관계부처 협의)
- (중견기업) 4,000억원 펀드 조성*,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**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
 - * 정책자금(1,000억원) 및 희망 중견기업 출자 → 민관합동 펀드 조성('22~'27)
 - ** ①원천기술 사업화(연구원), ②공급망 구축(중소기업) 등 분야별 공동R&D 신설('23)
- (생태계고도화) 친환경, 디지털,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·기술·사업모델 혁신* 지원

[생태계 고도화 추진계획(안)]

탄소중립	· 탄소 多배출업종의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집중 투자
디지털	· 디지털 협업공장(50개) 구축 등을 통한 AI기반 생산성 혁신
서비스화	· 제조 지원(공정 최적화 솔루션), 제조부가(설비 예지보전, 장비 구독서비스), 제조 융합(모빌리티, 디지털 헬스케어) 등 집중 지원

□ (산업대전환)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

- (첨단 산업) 민간 기업이 신속·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 추진

- ① (반도체)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인프라구축, 세제, R&D 등 지원
- ② (디스플레이)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고부가가치 기술 선제적 확보
- ③ (배터리)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, 안정적 소재 공급망 확보
- ④ (AI로봇) 핵심부품·SW 자립화 및 안전기준 도입·국산 공공수요 창출 추진

- (주력산업) 디지털·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(Fast Mover) 전략 추진

- ① (자동차) 배터리·반도체 등과 전략적 제휴 강화, 1,200개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
* (협력) 배터리셀 공장 합작, (내재화) 저수준 車반도체(ECU, MCU 등)부터 우선 개발 등
- ② (철강)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, 수소이송용 강재 등 고부가 제품 생산
- ③ (조선) 자율운항선박 개발, 생산기술인력 1만명 양성,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*
* E-7(용접·도장) 쿼터 추가 확대(20→30%), E-9(고용허가제) 업체별 한도 확대 협의 중

※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

2.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

- (공급망연계)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* 및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·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

* (한-영 핵심 공급망 협력 MOU) 공급망 교란으로 영향받은 품목의 신속한 공급 지원

- (첨단산업혁신)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* 등을 통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여 우리 산업 혁신을 가속화

* (미국) 공급망·산업협력 대화 본격화(금년 하반기 세부 분과회의 개최), (체코·폴란드) 원전·방산·첨단산업 협력

- (그린·디지털) 그린*·디지털**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 선제 조성

* (그린) IPEF 청정에너지·탈탄소 논의, OECD 포괄적 탄소저감 접근 포럼, WTO TESSD 등

** (디지털) 한-싱 DPA(디지털동반자협정) → 싱·뉴·칠 DEPA 가입 → IPEF 디지털협정 참여

- (국제사회기여) IPEF 국제규범·표준 논의 주도, 개도국 난제 해결 (식량·기후위기 등) 참여 및 산업성장 경험 전수* 등 리더십 발휘

* 인니(공작기계), 필리핀(금형), 베트남(생산기술) 등에 센터 조성 및 기술·인력 지원

3. 에너지 공급·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

- (원전역할 강화) 원전 비중을 30% 이상 확대하여 튼튼한 에너지안보 구축
 - (원전) 신한울 3·4는 환평 즉시 개시 등을 통해 '24년 건설 추진
 -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
 - (전력수급) 최대 9.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 하계 수급 관리
 - *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은 5.4%~10.0% 전망 (전력 예비력 5.2GW~9.2GW)
- (수요 효율화) 그간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다소비·저효율 체제 개선
 - (수요정책) 에너지캐쉬백 제도* 전국 도입, 에너지 다소비기업 (30개사)과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 수요효율화 추진
 - * 주변 세대단지 간 전기절감률 수준을 비교,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 달성시 캐쉬백 인센티브 제공
 - (시장원칙)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누적된 전기·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, 전기위원회 전문성·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 회복
- (신성장동력 창출)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 적극 육성
 - (원전산업) 생태계 조속 복원 및 원전 수출 주력
 - 금년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하여 1,300억원으로 확대
 - 신한울 3·4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(23.7),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초 착수
 - 연내 1조원 이상 금융·R&D 지원 및 '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조기공급
 - '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·폴란드 등에 수주역량 결집
 - (에너지혁신벤처) 5천억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, 규제개선, 공기업 연계 시장창출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벤처 5,000개 육성
 - * (기업수) '20년 2.5천개 → '30년 5천개, (일자리) '20년 3만개 → '30년 10만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박성수 사무관(☎ 044-203-42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기업 투자프로젝트와 직결된 애로 해결사례

- ① A사는 열분해유 공장 신설 계획이나, 업종 제한으로 산단 입주 가능여부 불확실 → 업종분류에 대한 적극해석으로 산단 입주 허용(산업부)
- ② B사는 소재 R&D 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나, 희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부지 확보에 애로 → 농업진흥지역 신속 해제(농림부)
- ③ C사는 스마트야드 구축 계획으로 산업용로봇 활용시 울타리(1.8m) 설치가 필요하나 로봇이 계속 이동하는 공정특성상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
→ 안전성 확인기준 마련 후 울타리 없이 용접로봇 활용 허용(고용부)
- ④ D사는 이차전지 생산시설 투자 계획이나, 인근에 대학분원 설립예정지가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교육환경평가가 진행 중
→ 先 생산공장 착공, 後 교육환경평가 심사로 신속한 투자 지원(고용부)
- ⑤ E사는 해외공장 매각 후 국내 투자를 검토 중이나, 엄격한 유턴 지원요건으로 국내 복귀 부담이 큰 상황
→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설비구축도 유턴으로 인정(유턴법 시행령 개정) (산업부)

목표지향형 「메가 임팩트 프로젝트」 추진

- (배경)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따라 산업R&D도 추격형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 필요
- (주요내용) 향후 5년간 반도체, 수소, 미래모빌리티 등 경제·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「메가 임팩트 프로젝트」 10개 선정·추진
 - 민간전문가 중심 '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위원회'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선정, 기획, 운영·관리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
 - 선정 프로젝트는 기술개발, 사업화, 인력양성, 제도개선 등 통합 지원
- (추진계획)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위원회 출범('22.9월) → 「메가 임팩트 프로젝트」 선정('22.11월)

창의적 혁신인재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

- (배경) 인재중심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, 기술·경제의 판을 바꾸는 '창의적 인적자본' 창출 필요
- (주요내용) '창의적 인적자본' 창출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
 - 창조적 인적자본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산학연 추진체계 구축
 - 창조적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, 수업방식, 평가, 학생선발, 교육비 등 교육 전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
- (추진계획) 「창조적 인적자원 창출방안」 마련을 위한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, 대학, 연구기관 등 논의 추진('23~)

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

- (주요내용) '22~26년간 1.53조원을 투입(중기재정 기준)하여 14만명* 양성
 - * (신산업) 3.9만명, (주력산업) 5.2만명, (탄소중립) 1.2만명, (산업협력) 3.9만명
 - (석·박사 고급인재) 반도체·이차전지·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석·박사 R&D·설계 인재 집중 양성
 - (미스매치 해소)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한 非학위제 민간 교육 확대
 - (재직자 교육) 조선, 자동차 등 주력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직무전환 및 역량혁신(AI융합) 교육훈련 실시
 - (생태계 구축) 산업별 SC(20개 협·단체), 공과대학 협의체(74개 공과대학) 등 산학 생태계를 구축하고, 인력실태조사·전망 등 통계기반 마련
- (추진계획) 산업브레인센터 구축(23상), 「(가칭)산업인력혁신특별법」 제정 추진(23下),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(23上) 등

「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」 도입

- (배경) 제조공정과 디지털기술 융합이 확산 중이나, 산업에 대한 이해와 SW 역량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력은 부족
- (주요내용) 업종별 “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” 도입('23)
 - 제조 업종별 제품설계, 생산공정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기업의 산업디지털 융합인력 수요에 맞는 구직자·재직자 교육과정 운영*
 - * 업종별로 산업디지털전환 지원센터, 협단체, 연구기관, 기업, SW교육기관 등이 참여하여 업종별 요구역량 도출 및 교육과정 개발·운영
- (추진계획) 「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구성방안」 수립*('22.10) → 업종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발족·운영('23~)
 - * 주요내용(안): 인력수요 파악, 요구역량, 교육과정 설계, 기존 SW 교육과 연계방안 등

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

- (배경)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진입 후 직면하는 세제 지원 축소, 판로·고용 등 각종 규제가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
- (주요내용) “중소→중견→글로벌 기업” 성장사다리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성장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
 -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, 판로·고용 등 규제 합리화 추진
 - '27년까지 총 4,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조성
 - 중소·중견 상생혁신 R&D 등 중견기업 주도 협력형 R&D 추진
- (추진계획) 「중견기업 지원제도 합리화 방안」 수립('22.下), 중견기업 도약지원 1호 펀드(가칭) 조성('22.下) 중소·중견 상생혁신 R&D* 신규 추진('23~)
 - * 「중견·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('22.3, 총 5,855억원)

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

- (배경) AI, IoT,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,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제조서비스 산업 성장* 추세
 - * ①제조 지원: 공정 최적화 솔루션(GE, Siemens), ②제조 부가 : 설비 예지보전, 장비 구독서비스(Boeing, 獨Trumpf), ③제조 융합 : 모빌리티, 디지털 헬스케어(Tesla, Fitbit)
- (주요내용)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과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,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지원
- (추진계획)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 ('22.下) → 「新제조서비스 추진계획」 수립('23)

첨단 산업 공급망·기술 통상 파트너십 강화

- (배경) 산업-통상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, 첨단 산업 혁신을 가속화 필요
- (주요내용) ①산업-공급망 연계형, ②첨단산업 혁신형 통상전략 추진
 - 조기경보시스템,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단기적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고, △광물·원자재 부국, △첨단 산업·기술국 등 국가 유형별 맞춤형 협력으로 구조적 공급망 재편 대응
 - 첨단지식·인력 교류를 촉진하여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, 미국,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원전·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성과 창출
- (추진계획) 인태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필러 협상 참여('22.下 지속), 한-미 공급망·산업협력 대화 세부 분과 개최('22.下)

글로벌 그린·디지털 통상환경 개선

- (배경) 글로벌 그린/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 필요
- (주요내용) 글로벌 그린·디지털 통상 전략 추진
 - 주요국 환경 관련 무역 조치 도입(EU CBAM 등)에 대응하고, 글로벌 그린 통상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
 -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*하고,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디지털 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
- * 한-싱 DPA(하반기 서명) → 상·뉴·질 DEPA(연내 가입협상 타결) → IPEF 디지털협상(논의 참여)
- (추진계획) (디지털)인태경제프레임워크 무역 필러(디지털 등) 협상 참여, 한-싱 DPA 정식서명('22.下), DEPA 가입협상 완료('22.下)
(그린)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청정에너지·탈탄소·인프라 필러 참여, EU CBAM 대응을 위한 EU 및 주요국과 양자협약, WTO TESSD(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,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) 및 OECD 무역과 환경 논의 참여

원전 일감 1,300억원 규모 공급

- (배경) 에너지안보, 탄소중립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 되는 흐름에 대응하여 원전 적극 활용 및 수출산업화 필요
- (주요내용)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 추가 공급 추진
 - 「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」('22.6)에서 발표한 원전 일감 925억원에서 추가 일감을 최대한 발굴하여 금년도 1,300억원 규모 일감* 공급
- * 원전 예비품, 설비개선, 신한울 3·4호기 설계 일감 등

에너지신산업 창출의 주역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본격 추진

※ 에너지혁신벤처란 기술,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생E, 에너지저장, 수요효율화, 수소, CCUS 등 에너지·기후 분야에서 新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·중소·벤처 기업

□ (배경)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탈탄소화, 전기화, 분산화하면서 C-Tech* 중심 새로운 기회요인 및 비즈니스 수요 창출 중

* **C-Tech**: 기후(Climate)·탄소(Carbon)·청정(Clean)에 관한 에너지·산업 기술

○ 4차 산업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융·복합한 에너지혁신벤처 등장

□ (주요내용) 에너지신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을 통해 '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,000개 발굴, 에너지 예비유니콘 10개 이상 육성,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

3대 전략	9대 과제
<p>① (투자) 사업화금융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에너지혁신벤처 투자펀드 신설 ▸ 에너지 와일드캣 창업 프로그램 신설 ▸ 유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저변 확대
<p>② (시장) 초기수요 창출 지원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공기업 수요연계형 R&D 신설 ▸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완화 ▸ 해외진출 지원
<p>③ (인프라) 혁신성장 기반조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석·박사급 고급 에너지기술인력 3천명 양성(~'25) ▸ 시장지향형(market-oriented) 투자 생태계 조성 ▸ Post R&D 성과정보 관리체계 고도화

□ (추진계획) 「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」 발표 ('22.8월 예정)